



“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 가고 있다”

관련 기사 2, 3면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4~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6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트럼프를 어떻게
패배시킬 것인가?

7~10면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12~13면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13면

이스타항공 정리하고
정부가 국유화해
일자리를 지켜라

14면

현대중공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5면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16면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후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안에서 친서민 행보는 여간 고난도 묘기가 아니다

김문성

문재인 정부가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 분야 최대 지원액이 가구당 200만 원으로 거론되는데 그 돈으로는 한달치 임대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지만, 2차 지원 총예산이 1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보면, **초점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경제가 더 나빠져 기업들을 긴급 구제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주들의 더 중요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결국 기만이고 진실은 재난지원금 총액을 절반 줄이면서 노동계급의 다수가 재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는 거의 시늉 수준이고, 쥐꼬리만한 지원을 할 때조차도 주기 싫은 티를 팍팍 낸다.

노동자들은 현 상황의 최대 피해 집단이다. 갑자기 일이 줄어 재택 근무를 하며 각종 수당이 깎이거나, 일감이 없어지거나, 또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업 분야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자들도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이 때문에 <노동자 연대> 신문과 정의당·진보당 등은 재난 지원을 모두에게(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보편 지급에 따른 소득 재분배 필요는 사후 증세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모두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 논쟁과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에 보편 지급을 촉구했었다. 이 문제로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공개 설전을 벌였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도 충돌했다. 이낙연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부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기도 하다.

이낙연의 입장은 청와대가 경제관료들을 지지하면서 선별지급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지금 당내 기반이 불충분해서 당을 장악한 친문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은 비문 후보들이 모두 낙선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고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지금 여권의 위세는 총선 직후에 비해 많이 꺾였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추락했고 사실상 위기가 시작됐다. 개혁 염원 배신과 부동산 등 경제 실패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로 이번 위기는 심상찮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문재인과의 차별화 압박을 더 크게 받아 더 큰 모순에 봉착하



민주당 주류와 진보 염원 지지층 사이에서 이 지사가 줄타기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게 될 것이다.

정부가 끝내 선별지급을 결정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당 밖 여론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이 글을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양쪽 모두에서 비판이 터져나왔다. 두 당 모두 선별지급으로 재난 지원금 규모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그러자 다음 날 이 지사는 금세 말을 주워 담고 문재인 정부 지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권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 바람직하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휘방 놓을 생각이 없다.”

민주당 개혁파로서 친서민적 이미지와 행보 때문에 지지를 얻은 그가 우파와 타협하는 정부 정책에 금세 굴복한 것이다. 이재명은 친서민적 개혁 정책을 주장하며 정부와 낯을 세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배계급의 이익을 고려하는 민주당 주류의 현실론적 압박 앞에서 급격히 그 수위를 낮추거나 말을 주워담는 일이 잦았다. 그도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의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논쟁 과정에서 이 지사는 1인당 30만 원 지급에서 10만 원 지급으로 후퇴한 바 있다.

진보 염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해 들어 오른 것은 코로나

위기 악화 국면과 문재인 정부 지지 하락이 두드러지면서다. 이는 그가 이전부터 구축해 온 이미지와 관계있을 것이다.

그는 줄곧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주류보다 더 반(反)우파적이고 노동자·서민에 친화적이며 과당성 있는 개혁가로 보이려고 노력해 왔다. 노동계급 출신으로 입지전적 경로로 정치인이 된 것도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됐다.

그는 2016년 가을 주류 정당의 기성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2017년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당내 대선 경선에서 자신이 문재인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가임을 자처했다.

그의 정계 입문 계기는 성남시의료원(공공병원) 설립 운동이었는데,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정식 개원 전부터 코로나 대응 병원 구실을 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 조처뿐 아니라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급에도 앞장섰다. 정부가 선별 지급 입장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경기도는 도 재정으로 보편 지급을 실행했다. 이는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방정부들도 속속 재난 지원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행보 때문에 그는 안 그래도 2016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친문 진영에게 찍혀 있던 터에 더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경기도에서 얻은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진보 성향 표가 그에게 쏠렸기 때문이다.

2018년 압도적 표 차이로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되기도 친문 실세들의 고발과 공격으로 당선 직후부터 곤란함을 겪고 올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도지사 직을 유지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상고심에서 이 지사를 도운 변호인단은 조국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변호를 맡은 LKB파트너스였다. 이 로펌은 이박에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전병현의 뇌물 사건, 문재인 판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조국 수호 집회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로펌을 이끄는 이광범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친문계의 이재명 견제는 경쟁자 제거 시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서민층의 반발과 분노가 좀 더 급진화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래야 정부의 배신이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 이는 이 사회의 주류 전체에 유리한 것이다. 그를 주류 언론 전체가 포폴리스트 취급하는 이유이다.

이런 공격에 길들여져서인지 몰라도 최근 2년새 이 지사는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낮추고 문재인 정부와 친문 진영의 위선과 배신에 자주 타협해 왔다. 대선 후보로서 당내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이 컸겠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는 지난해 수도권 버스 대란 때 (서울시와 달리) 정부의 버스 요금 인상 압력을 수용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부패와 위선에 대한 분노가 컸던 지난해 하반기

에는 자신이 당한 근거 없는 비난 공세에 견주며 조 전 장관을 감쌌다. 올해 윤미향 의원 문제로 위안부 운동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계종이 관리하는 나눔의 집(위안부 할머니 쉼터)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했지만, 윤미향 의원과 연관된 경기도 안성 쉼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올해 코로나 유행 첫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전가용 신천지 마녀사냥에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비록 실제로는 신천지 교단의 협조를 받아서(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방역을 했지만 말이다.

정부보다 더 나은 노동정책을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뒤로 물러섰다. 경기도 콜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는 이주민 다수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

한편, 그가 재난지원금을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상층부와 타협을 보여 준다.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말은 강하게 했지만, 사실은 후퇴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선별지급에 대한 이 지사의 일같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에게 사이다 발언이었을 것이다. 뒤늦게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가능성도 흘러고 있다.

이런 행보는 정부의 개혁 배신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반면, 이 지사가 친문과 자신의 지지층 사이에서 줄타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사회 상층부의 위세를 높이고 진정한 개혁과 진보 염원 대중의 염원을 사기 저하시키는 효과를 낼 위험이 커진다.

2차 재난지원금도 보편지급 해야 한다

장호중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크게 강화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확진자 추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 발견되고 학생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이 급등했고, 정부도 '불가' 입장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논란 끝에 결국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별 지급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할 정도로 여전히 보편 지급 여론이 많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보편 지급 의견이 45퍼센트를 넘는다.

그만큼 경제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적이 적확한 현실 진단이다. 비록 소심하게도 그는 친문 진영의 반격을 받아 "정부 여당의 조정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을 약속했지만 말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자, "죽어가는 데 목 졸리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 자영업자들과 고용된 노동자들, 가족까지 고려하면 자영업 부문에서만 최소한 100만 명이 소득 절벽과 부채 증가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올해 7월 5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7000명 줄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5000명 감소했다.) 이들에게는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거리두기가 사회 전체의 보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데다, (늦었지만) 정부가 강제한 것이니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서민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100만~200만 원가량(4인 가족 기준)을 한 차례 지급하겠다고 한다. 잠시 숨통을 틔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 스스로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으므로 더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만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발표에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조차 제대로 못(안)해 평소에도 조세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마당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 되면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창업한 자영업자들과 아예 폐업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증명 없이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단축한 해당 업종에 '보편' 지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고를 통보받은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 '선별지급은 이들과 더 많은 노동자·서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고도 했는데, 수령 대상자들 중에도 매출 감소 폭 등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지급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정부의 선별 지급 대상에는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다수의 노동자·서민층이 빠져 있다. 호황을 누리는 일부 정보통신 기업들을 제외하면 많은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수당, 성과급 등의 삭감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605명, 아시아나 항공 2차 하청업체인 (주)에어케이티링서비스는 196명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비용이 늘고, 연이은 기상 악재에 추석 차례상 비용만 25퍼센트 가까이 인상되는 등 실질소득 감소 요인도

많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이들은 아예 포함돼 있지도 않다. 대리운전노동자 등 적잖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도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 뻔하다.

원망과 배신감의 불길

정부·민주당과 달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은 보편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를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지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대부분 사용된 데 비해, 6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만 명가량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선별'의 목적이 정부의 말처럼 저소득층에게 '더'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심상정 대표 등의 지적처럼, 진정 저소득층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모두에게 주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게 맞다.

반면 정부의 선별 지급 논리는 군색하다.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지만(이낙연)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급할 계획은 없다. '먼저'라는 말로 저소득층을 우선 고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려 하지만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별 지급은 비교 대상을 없앴으로써,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를 최소화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규모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절반도 안 된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3조

원, 고용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돈은 최대 3조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왜 이번에는 선별이냐는 물음에 정부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총선 전 다르고 총선 후 다른 정부 정책이 불신받는 것은 당연하다.

선별 지급에 대한 불만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국가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국가부채 850조 원의 1퍼센트도 안 되는 돈을 아끼겠다며 수많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594조 원에 이르는 기업 금융 지원과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고, 이전 추경에서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주는 돈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면 노동자·서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경제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시장 중심 경제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듯하다.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론을 펴던 경제부총리 홍남기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던 소득주도성장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기도 하다. (비록 그때도 말뿐인 호의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해 정부의 지원은 더욱 필

요하다.

결국 자본가들의 이윤과 대중의 삶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원이 불필요한 부유층에게 지급되는 돈이 정말로 아까운 것이라면 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면 될 일이다. 사실 수십만 원가량의 액수는 이들에게는 별 의미도 없으니 '형평성'을 따질 일도 아니다.

반면, 지원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은 최악의 경우 배제되거나, 모멸감과 분노, 짜증만 안겨주는 일이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실랑이와 신경전을 거쳐야 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만다. 콜센터나 게시판은 늘 불통이기 십상이다. 선별 지급 발표를 듣자마자 '당신들이 와서 선별해 보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진 까닭이다.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불만이고, 못 받는 사람들은 누구는 세금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악용해 그 액수를 최소화하거나 차츰 삭감하고 없애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번갈아 삭감해 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논리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가로막고 반목하게 만드는 한편, 기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 보편적 복지가 더 나은 이유다.

노동자들은 코로나·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보장 등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 경제 활성화를 독촉하다가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오는 악순환도 끊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다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정선영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회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라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이윤 창출에 필수적인 공장과 회사의 운영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래서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나 쿠팡 물류센터 감염에서 보듯 많은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교육, 육아와 노인 돌봄을 보조해 주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대거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축소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학과 개원을 연기했고, 방과후 교실은 문을 닫았다. 경로당, 경로식당,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 등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 우려로 인해 집으로 와서 육아와 돌봄, 가사를 지원해 주던 사회서비스의 이용도 크게 줄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가정에 떠넘겨졌다. 물론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고용해 가사나 돌봄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층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날짜가 노동자 1명당 겨우 10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고 진보단체들도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요구해, 최근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20일(한부모 가정은 25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코로나 재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지난해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75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담당했다. '한국의 노인 및 아동 돌봄 가족 조사'에 따르면 가족 중 노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의 85퍼센트가 며느리, 딸 등 여성이었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이는 남성 노동자에게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 구실이 기대되고 더 오랜 시간 일하고 더 멀리 출퇴근해야 한다는 점,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제나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가 더 많이 주어지는 상황 등이 맞물린 결과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여성들의 가사노동 부담은 더욱 늘었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7월 중순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성들의 자녀·노부모 평균 돌봄 시간은 이전보다 무려 6시간 이상 증가했다.

한부모 가정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가정 넷 중 하나가 한부모 가정이다. 이 중 4분의 3은 여성이 가정인데, 한부모 가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나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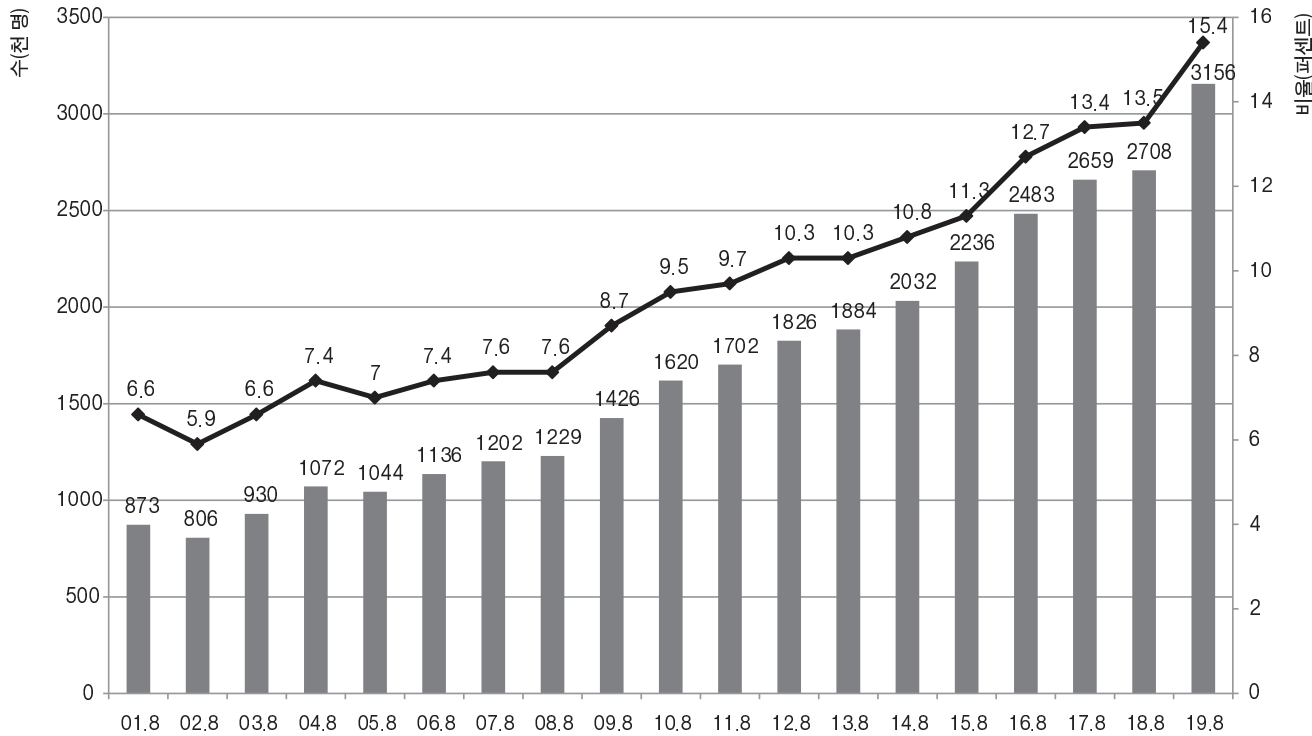
가정 폭력 증가

이런 상황은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소외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여성과 아이인 가정 폭력 희생자들은 코로나19 하에서 더 큰 공포와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족을 통해 애정과 도움, 유대를 형성하기를 바라고, 그런 따뜻함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긴 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가정은 일상적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이기는커녕 그런 압박감을 표출하는 곳이 되기도 쉽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쉬운 것이다.(관련 기사: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노동자 연대> 2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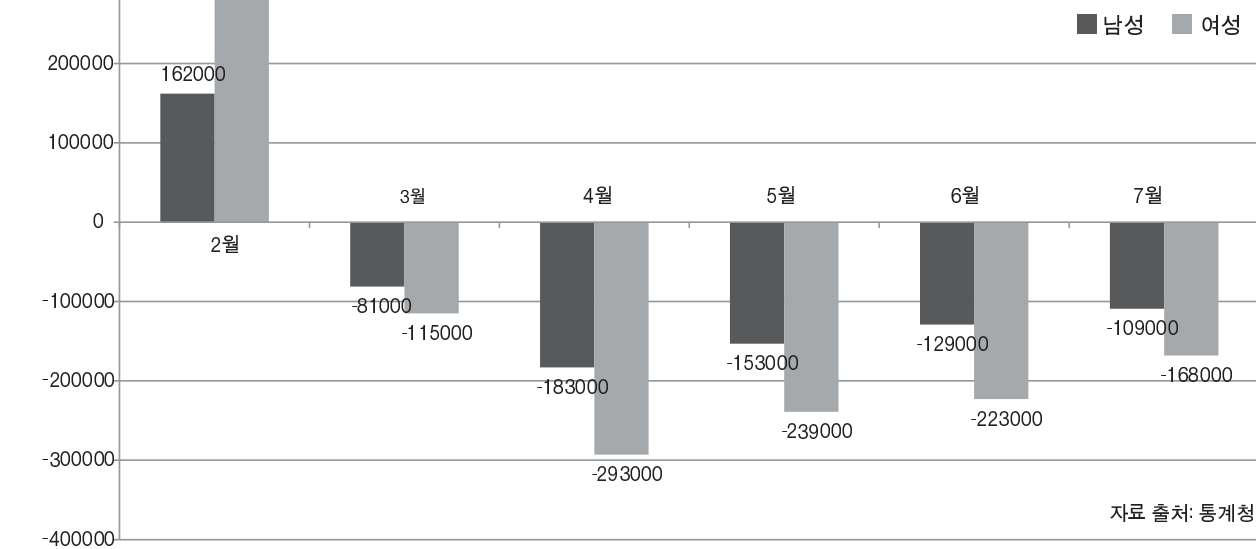
<그래프1> 증가돼 온 시간제 일자리

자료 출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결과>, 김유선



<그래프2>

코로나19 기간 동안 남녀 취업자 감소 규모 (전년 동원 대비)



악화되는 여성 노동자의 삶

개별 가정에 가사와 양육 부담이 떠넘겨져 있고, 여성이 그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육아 기간 경력 단절을 겪는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비율은 지난해에도 기혼 여성의 19.2퍼센트에 달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 여성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가사와 돌봄을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 둔 여성은 더욱 늘었다. 같은 이유로 일이나 구직 노력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은 3월 10만 3000명, 4월 27만 3000명 늘었다.(전년 동월 대비, 한국여성노동자회)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복직을 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는 크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9.4퍼센트에 불과했다(통계청 자료). 여성의 월평

균 급여는 남성의 67.8퍼센트로,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 비정규직 비율도 여성들이 더 높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주들은 여성들에게 양육과 가사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이들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이 노동하기를 바란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고용을 높여 해결하고, 여성을 집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활용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가정 양립"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의 굴레

하지만 문제인 정부 하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일자리는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이다.(그래프1)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시간제 노동이 늘었는데, 특히 여성의 증가폭이 더욱 크다. 지난해 8월 여성 시간제 노동자 수는 231만 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7.1퍼센트나 증가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을 양

립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일자리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이 일자리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일 뿐이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87만 원에 불과하다.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6.1퍼센트이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20퍼센트가 안 된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전국여성노조가 여성 시간제 노동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퍼센트가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길 원했다.

물론 지난 수년간 남녀 모두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 왔다. 이는 노동운동 일각에서 유행하는 주장, 즉 비정규직화가 지속증가하고 여성 노동 일반이 비정규직화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저항 잠재력이 사라졌다는 주장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 준다. 다만, 지난해 불황이 심화하고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쓰면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 추세는 소폭이지만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뒤 노동자들은

심각한 실업난에 고통받고 있는데, 여성들이 받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올해 3~7월 월평균 취업자수 감소는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13만 1000명, 여성은 20만 7000명이었다. 일시 휴직자는 올해3~4월 남성은 297만 5000명, 여성은 369만 6000명이었다.(그래프2)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종사 비율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서비스업, 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임시직 등이 고용에서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도 작용했다.

시장화된 돌봄 서비스가 문제를 악화시키다

정부는 여성을 고용 시장에 끌어내기 위해 양육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한 값싸게 추진하려 하면서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교실, 노인 요양시설 등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영세한 민간 업체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열악한 비정규직이다. 이는 돌봄의 질 저하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사업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이미 크게 후퇴했다.

코로나19는 열악하고 시장화된 돌봄 서비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가령, 초등학교에서 제공된 긴급돌봄을 담당한 노동자들은 80퍼센트가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물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했다. 이 초동돌봄전담사들은 몇 년 전부터 노조를 결성해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했다면 이번 위기 때 훨씬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돌봄 서비스 부문의 다른 노동자들도 대규모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를 겪어야 했다.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아이돌봄 노동자 등은 노동자성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로 처지가 더욱 악화했다.

올해 6월 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사노동자의 방문 가정 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평균 소득이 이전 112만 3000원에서 63만 9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이돌보미 노동자들도 월 평균 123만 5000원에서 88만 원으로 줄었다. 방과후 강사들은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다. 81퍼센트가 수입이 아예 끊겼다. 월 평균 소득은 223만 9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줄었다.

여성 차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여성 차별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개별 가정에 육아·돌봄·가사노동의 책임이 떠넘겨져 있고, 그 주된 책임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흔히 여성이 누군가를 돌보는 데 더 적합한 본성을 가졌다고들 생각한다. 부드럽고 섬세한 게 여성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이 폭력적이거나 더 대담한 기질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누군가를 돌보기 적합한 존재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여성이 돌봄과 가사의 대부분을 떠맡는 것은 인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의 산물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경쟁 압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자본가들은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는 가능한 더 적은 돈을 들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노동계급 가족에 노동력 재생산의 부담(노동자들이 먹고 쉬며 노동력을 재생하고, 후대의 노동력을 양육하고, 노인을 돌보는 일 등)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일을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주로 전가함으로써 자본주

의 국가와 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그토록 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이유이다.

국가는 저출산을 우려하며 여성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강조한다. 양육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법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에게 출산휴가를 준 기업은 9.6퍼센트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 1년을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휴직에 따르는 임금 보전액이 최대 120~15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쉽게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해고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이것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기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

임신·출산이 해고나 승진 누락 등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믿고 맡길 만한 양육시설도 매우 부족하다.

여성 차별로 남성 노동자들이 득을 볼까?

여성 차별의 현실을 보며 많은 페미

니스트들은 흔히 여성 차별에서 남성 일반이 이득을 본다고 여긴다. 그러나 개별 가정에 자녀 양육이 내맡겨져 있는 데서 진정한 이익을 보는 것은 사장들과 국가이다. 지배계급은 가족 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노동계급의 부모들에게서 거의 공짜로 제공받고, 간병과 노인 돌봄 비용 지급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양육이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상황 속에서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 모두 큰 부담을 지며 살아가야 한다. 많은 남성 노동자들도 육아 비용 부담 때문에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려야 한다. 만약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 육아, 돌봄, 가사를 사회화한다면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은 모두가 득을 볼 것이다.

여성에게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해 이득을 보는 것도 기업주와 국가이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남성 노동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열악한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남성 노동자들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라는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지배계급은 여성 노동자를 차별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며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려 한다.

물론 자본가계급의 여성도 차별을 겪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로 가사와 양육, 돌봄 등을 전담할 사람들을 고용해서 차별의 효과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윤을 위해 여성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고, 양육 등 돌봄을 대폭 사회화하는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지배계급 여성도 여성 차별과 노동자 착취에서 득을 보는 것이다.

불황이 심화하는 속에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홈플러스 여성 사장 임일순은 홈플러스 지점 매각을 추진하며 노동자 수천 명을 구조조정하려 한다. 주주들에게는 수백억 원의 배당 잔치를 벌이더니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여성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성 차별이 사라지려면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인 지배계급에 맞서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자본주의 이윤 논리에 맞서 노동계급의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여성 차별을 진정으로 없앨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잠재력

코로나는 노동계급과 서민층에 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지만, 팬데믹을 이겨내는 데 노동계급이 얼마나 중요한 구실을 하는지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고 악화된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해 줬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응원하는 분위기도 있다. 세계 보건의료 노동자의 70퍼센트가 여성이고, 한국은 그 비율이 77.3퍼센트에 이른다. 여성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주변화돼 있고 경제 위기 시기에 손쉽게 우선 퇴출된다는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의 일면적 주장과 달리, 오늘날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장기적을 봤을 때 여성 노동계급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고, 여성 노동자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과 사회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난 2017년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이 증가했는데, 그중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로 가입했다.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부문 등에서 여성들이 많이 가입했다. 학교비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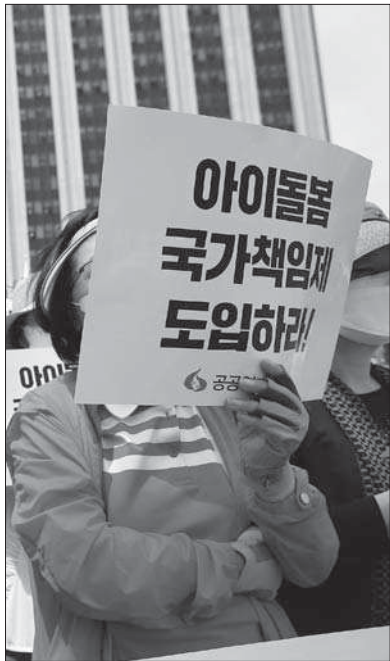
직 노동자들, 대학 청소 노동자들, 병원 노동자들 등은 지난 수년간 투쟁을 통해 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착취와 차별 강화에 맞서 계급투쟁이 전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악화하는 여성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서도 해고와 임금 삭감에 맞서야 한다. 또 방역과 돌봄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양질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 돌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방역 물품을 제공하고, 학급당 학생 수와 노동자 1인당 보육 인원 수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방역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 돌봄 노동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육아와 노인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기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은 무려 23퍼센트나 증액했지



5월 26일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

만 교육 예산은 되려 2.2퍼센트 삭감했다. 보육 관련 예산도 찢끔 증액에 그쳤다. 올해 노동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들에게 민간위탁의 열악한 일자리를 그대로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경제 불황이 닥친 상황에서 정부는 이윤 수호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업주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결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치솟고,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은 해고와 소득 감소에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를 배제하는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로 정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약도 추진 중이다. 이런 친기업·반노동 정책 속에서 노동계급 일반이 고통받고 있고, 여성 차별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불황 속에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서는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하고 단결과 연대를 전진시킬 정치가 중요하다. 여성 차별을 남대여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윤체제의 동학과 연결해서 설명하며 차별과 착취 모두에 맞서 체제를 변혁하려는 혁명적 사회주의의 분석과 조직이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를 건설할 때 진정한 여성 해방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전망을 추구해 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딜레마

1년 전 브렉시트는 완전히 지겨울 정도로 헤드라인을 도배했다. 물론 이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를 대신했고, 이 문제는 따분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러나 이제 브렉시트 논란이 전보다 맹렬한 기세로 복귀하고 있다.

영국은 1월 31일에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탈퇴했지만, 실제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2020년 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정부가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를 놓고 진행한 협상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지금 으로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지난주에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 미셸 바니어는 가장 최근의 협상이 끝난 뒤 “지금껏 영국은 건설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영국 측 협상 대표 데이비드 프로스트는 일요일판 <데일리 메일> 인터뷰로 반격에 나섰다.

그 기사는 프로스트를 “노르웨이 주재 영국 대사까지 지내고” 위스키 협회 협회장을 맡은 “전직 외교관”으로 멋지게 포장했다.

프로스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속국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법률은 우리가 통제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연합의 방식에 우리를 가두는 ‘공평한 경쟁’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영국 내부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장법을 도입하려 하는데 이 법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두고 힘겹게 도출한 합의안을 깨뜨릴 수 있다.

심중팔구 영국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어선이 영국 영해로 접근하는 조건을 놓고 서로에게 적잖이 엽포를 놓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무역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재화와 서비스를 유럽 단일시장에 계속해서 무관세로 팔려면, 유럽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영국도 사실상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공평한 경쟁” 조항이다. 보리스 존슨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에 합의하면서 발표한 정치 선언에서는 이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연합은 존슨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완강히 요구 중이다. “템스강의 싱가포르”, 즉 [규제가 약한 것을 이용해 서] 낮은 단가로 유럽 대륙 기업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이웃 국가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브렉시트 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조금

그래서 유럽연합은 산업 보조금 금지 조치를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따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7월에 보도한 대로, 존슨의 수석 보좌관인 도미니크 커밍스가 이끄는 정부 내 브렉시트파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소한 으로만 규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커밍스는 “8억 파운드[1조 2000억 원]를 ‘영국 기업이 진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연구’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이런 쟁점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연합과 영국이 정말로 애쓴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은 줄곧

다른 데, 그러니까 팬데믹 대응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이전에 거의 1년간 공식 정치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존슨이 지난해 가을에 재협상으로 탈퇴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하원에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존슨과 프로스트의 엽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기업과 유럽연합을 연결하는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텐데, 코로나19 감염이 한 번만 더 폭발해도 경제 위기가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는 피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급격하게 결별하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니

컬라 스터전이 제2차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에 탄력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 셈법은 복잡하다. 존슨이 끊임없이 유턴하며 정부 상황을 악화시킬수록, 애초 코로나19 대유행을 잘못 처리해서 드러난 그의 냉담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끊임없이 주목받게 된다.

대입 시험[을 ‘알고리즘 점수로 대체하려다 철회한 것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유턴이었다. 그 후 우파 주간지 <스펙테이터>의 부편집장 이 사벨 하드먼은 “보리스 존슨의 80석 차 과반 의석은 장부 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러나 존슨은 장관과 의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를 제공한다. 바로 유럽연합과 진정으로 결별하겠다는 약속이다. 존슨은 친유럽연합파를 숙청하거나 침묵시키면서 보수당을 재탄생시켰고, 이제 그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노딜 브렉시트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바니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협상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타협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유럽연합도 만만찮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존슨이 보기에 하드 브렉시트 [유럽단일시장, 관세동맹 등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강경한 브렉시트]가 자신의 총리직 유지에 더 유리한 듯 하면, 그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1호 / 번역 김동욱

벨라루스 반독재 항쟁

혹심한 탄압에도 항의 투쟁이 계속되다

토마시 텡글리-에반스

벨라루스에서 9월 첫째 주말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위협에 굴하지 않은 것이다.

일요일인 9월 6일에는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수도 민스크에서 “단결을 위한 행진”에 참가했다. 주말 대규모 행진으로 민스크가 마비된 것은 이번이 4주차다.

브레스트, 그로드노 등 수도 바깥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와 행진에 나섰다. 5일에 열린 여성 행진에도 수천 명이 참가했다.

부정선거가 벨라루스의 민주주의 운동을 촉발했다. 26년 간 집권한 대통령 루카셴코는 자신이 자유주의 후보인 스바틀라나 치하놉스카야를 상대로 80퍼센트를 득표해서 승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행진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



8월 16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시위대

다. 대열이 대통령궁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루카셴코를 경찰차로”, “재판정으로” 하고 외쳤다.

정권은 운동을 가라앉히려 고공권력과 위협에 기대고 있다.

9월 6일 곤봉을 든 사복 강패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을 쫓아가서 두들겨 패는 일이 있었다.

7일에는 정권 반대파들의 기구인 조정부회의의 지도자 마리아 콜레스니

코바가 승합차로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70곳이 넘는 기업에서 비공인 파업이 벌어져 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파업 물결은 일단 주춤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회사로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 직장이 여전히 멈춰 있다.

차량 제조업체 벨라스의 일부 공장

들은 9월 첫째 주에도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로도크 오스트로시츠키 지역에서는 전력 노동자들이 경영진 건물 앞에 모여 정부가 운영하는 노조를 탈퇴할지 논의했다.

그로드노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대선 재실시와 경찰 폭력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호소문을 채택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손 늦추기”[태업]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에 복귀는 했지만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생산을 최대한 느리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정치적 요구와 경제적 요구를 연결시키고 향후 사태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작은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영기업] 벨라루스칼리의 탄산칼륨 광산에서는 파업 위원회가 경영진한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벨라루스칼리는 루카셴코 정권의 핵심 기업이다.

이 파업위원회는 환기 불량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저들은 우리 목소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강까지 빼앗으려 한다.”

만약 루카셴코가 퇴진하면 다음 단계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두고서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조정위원회에는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다. 자유주의 정치인, 사장들, 일부 파업 지도자들도 참가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지도부는 자유시장 정책을 더 많이 도입하려 한다. 루카셴코가 2000년대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고 펼치기 시작한 그런 정책을 말이다.

서방 지도자들은 자유를 요구하는 벨라루스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척한다. 그러나 영국군은 9월 첫째 주가 돼서야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협력을 일시 중단했다.

서방과 시장 정책은 벨라루스 노동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못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1호 / 번역 김중환



이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온갖 배경의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있다. 9월 5일 위스콘신주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

사진 출처: 민의가(고원영의(물리커)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의 흑인 살해가 끊이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비난하고 있고 이에 고무된 우익 민병대와 경찰이 잇따라 시위 참가자들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도 시위대 비난에 가세한 것은 우익의 기를 더 한층 살려 주고 있다.

다음은 9월 1일(현지 시각)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이 개최한 같은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를 녹취·번역한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계 미국인 버지니아 로디노(가운데)와 웨이먼 베넷(오른쪽)은 각각 미국의 마르크스21과 영국의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이다. 사회자 나디아 이브라힘(왼쪽)은 영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이다.

녹취를 한 한가는 씨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나디아 이브라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생중계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란의 미국: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트럼프를 무너뜨릴 힘”입니다. 저는 나디아 이브라힘이고 SWP 당원입니다.

연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볼티모어 시(市)의 버지니아 로디노입니다. 버지니아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의 활동가이자 녹색당 메릴랜드 주(州)위원회 공동위원장이고 ‘아시아·태평양 미국 노조연



맹(APALA)’ 메릴랜드 지부 공동소집자입니다.

또 다른 연사는 웨이먼 베넷으로 오랫동안 인종차별 반대 활동을 해 왔고, 연대체 ‘인종차별에 맞서자’(Stand Up to Racism)의 공동소집자이자 SWP의 지도적 당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 경찰이 흑인 남성 2명에게 발포한 뒤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11월 미국 대선이 벌써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미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먼저 버지니아에게 묻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위스콘신 등지에서 다

시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까?

버지니아 로디노: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최근의 시위가 어떤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유행에 엉망진창으로 대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명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국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처는 통행금지령이었는데,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포틀랜드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벌였죠. 많은 백인들을 포함해 운동 참가자들은 용감하게 맞섰고,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개학과 개강, 휴교가 잇따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캘리포니아 전체가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뿐 아니라 기록적 폭염이 닥쳤습니다.

경찰을 근본적으로, 때로는 혁명적으로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지만 지배계급은 일체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는 우체국을 공격하며 예산을 삭감했고, [대통령 선거]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우편 투표가 실시되면] 선거에 승복할지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 와중에] 투표하려면 직접 투표장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서 박탈된 것으로,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난 선거 제도이지만 거기에라도 참여하려면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온 배경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터져 나와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휩쓴 지 얼마 안 된 지금, 흑인 운동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전국적 파업과 시위에 나선 것은 완전히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실로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이 선수 노동자들은 이번 흑인 살해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부터 코

로나바이러스 문제를 둘러싸고 쟁의를 벌였고, 노동조건과 안전 문제에 관해 구단주·경영진과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조합원인 이 선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연대가 건설된 듯합니다.

최근에 또 흑인이 경찰에 살해됐는데 이는 개별 경찰관이 제아무리 교육 훈련을 잘 받아서 좀더 친절해지더라도, 경찰 자체가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기구이며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지배계급만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것도요.

이런 관점은 더는 급진적이라거나 황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체제는 고쳐줄 수 없다는 신념에 입각해 경찰 폐지를 요구하며 경찰에 맞서는 운동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나디아 이브라힘: 흑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실업 문제에서도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실업 수당 신청자가 100만 명 늘었다고 추산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실업 문제와 코로나 위기가 운동에 끼친 영향을 묻고 싶습니다. 계급 쟁점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나요?

버지니아 로디노: 물론입니다. 제가앞서 말한 모든 것들 즉, 기후 위기, 개학 강

행, 열악한 의료 체제, 경찰 탄압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노동계급과 가난한 유색인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런 만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노동계급의 운동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큰 운동들, 예컨대 미투 운동이나 그보다 앞선 [낙태권을 요구한] ‘여성 목숨을 위한 행진’, 심지어 환경운동이 한창일 때, 또는 그 후에 벌어진 논쟁이 떠오릅니다. 운동이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운동이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백인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핵심적인 차별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둘러싼 온갖 문제 제기와 논쟁이 벌어지곤 했죠.

반면에 지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전 세계에 아주 또렷하고 강력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운동이 노동계급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배자들의 팬데믹 대응을 보면 저들은 기업 지원에 수조 달러를 쓰는 것은 일사천리로 결정하면서, 안 그래도 저임금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연장해 주는 문제에서는 도무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처지이고,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전에 병상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반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언제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을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독극물 주사를 권할 뿐 아니라 의료 시설과 연구 예산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분명 계급 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체제가 고장났을 뿐 아니라 이렇게 망가진 체제를 애써 고치고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침내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간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체제를 굳이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계급으로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체제,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고 이 운동에서 계급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중심적입니다.

나디아 이브라힘: 폭력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인종차별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게 총을 쏜 극우 카일 리튼 하우스가 떠오릅니다. 그가 1월에 트럼프 지지 집회에 참가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죠. 트럼프는 집권하는 동안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극우에게 자신감을 심어 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익民兵대가 부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들은 운동에 어떤 위협을 가하나요?

버지니아 로디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극우가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은 지도력



“경찰 폐지하라” 이 요구에는 이 체제를 단지 고쳐 쓸 수 없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5월 29일 오�클랜드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흑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노동계급의 운동이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강력한 공명을 일으킨 것은 그 운동이 노동계급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 공백이 있을 때입니다. 지배계급의 양당 모두 어떠한 도덕적 갈림길에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극우는 그 공백을 노리고 우리의 의식에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강력하고, 확고한 정치적·도덕적 신념으로 극우의 공격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운동 앞에 놓인 더 중요한 도전은, 트럼프가 백인 국가주의[백인들이 국가에서 핵심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만들어 냈다가 저들이 행사하는 폭력이 트럼프 한 명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트럼프 개인만 제거하면 백인 국가주의도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해도 백인 국가주의자들은 거기에 적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이 당선하면 [트

럼프 집권 때 그랬듯이] 이들은 모두가 적으로 삼을 만한 백악관의 한 인종차별주의자와 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좀더 색깔을 흐리고 유연한 척 하면서 지리멸렬한 백악관의 대안을 자처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정치인처럼 바이든도 타협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나머지 중도 우파와 다른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좌파가 실질적이고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한 대항력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만큼 ‘대안우파’가 우리 운동에게 제기하는 과제는 백악관과 상·하원에 매달리는 선거 정치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매달리는 선거 정치는 여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실망시키만 할 것입니다. 운동의 힘을 빼고 활력을 없앨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노동계급에게 신뢰할 만하고 성취 가능해 보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 노동계급 자신이 대안이라는 것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대안우파’가 현실적 대안을 자처하며 치고 나올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거리의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우리의 것을 되찾으려 할 때 우리의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반면 스스로를 유권자로만 여기고, 표만 납득 받아가는 의회 정당에 힘을 내겠다는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고통만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나디아 이브라힘: 이번에는 웨이먼에게 묻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과 그 후 터져 나온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여러 면에서 실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위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이곳 영국의 모든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최근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은 제이컵 블레이크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 NBA 프로 농구 선수들이나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정의를 요구하며 경기를 보이콧했습니다. 지금 운동이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웨이먼 베넷: 5월 25일에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살해당한 사건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켰고 그 지진으로 세계 각지에서 저항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어떤 숨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은 어떤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현실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동지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인종차별은 모두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노예폐지론자 프레데릭 더글러스[1818~1895]가 말했듯이 인종차별은 지배계급이 우리를 서로 분열시켜서 모두 지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시위는 흑인들이 주도하는 다인종 시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악관의 저스레기, 인종차별주의자, 강간범[트럼프]의 폭력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오히려 전진하고 있고 그 점이 현 상황을 규정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었다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관들이 9월 11일에 법정에 서게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자들에게 사태가 맡겨져 있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 경찰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대중 운동이 거리에서 일어나 ‘침묵하지 않겠다’ 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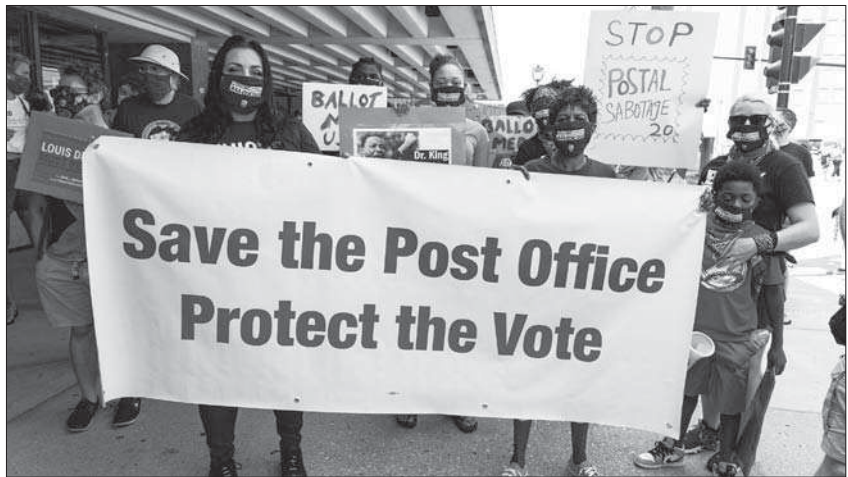
다른 많은 운동들이 그랬듯 지금의 운동도 기로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트럼프가 위험한 수준으로 각종 차별을 부추기고 극우 민병대를 고무하는 동안 우리는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17세 **흑인** 소년인 [카일 리튼하우스처럼] 누군가를 총으로 쏘고도 무기를 소지한 채 유유히 집에 돌아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 다뤄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 소년은 범죄자, 살인마, 파시스트 사상을 지지하는 자로 취급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종차별이 사회의 지배층에게서 오는 것이며 그들이 인종차별을 부추기지만 그러면서 저항도 촉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줍니다.

지배계급은 이런 상황을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그들에게 인종차별은 천성적으로 집어드는 무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1676년 미국에서] ‘베이컨 반란’이 일어나 흑인과 백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함께 뭉쳐서 영국에 맞서 싸웠을 때 지배계급은 인종차별이라는 그들의 천성적 무기로 대응했습니다.

영국은 노예무역을 개척한 나라입니다. 당시 보리스 존슨[현 영국 총리] 같은 자들이 인종차별을 발명해 그것으로 사람들을 등쳐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의 불평등과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보리스 존슨 같은 자들이 트럼프 비판을 일절 삼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주목하고 이 운동이 많은 것에 문제 제기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운동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말을 날려버리고, 연방 경찰이 출동하면 복종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박살냈죠.

버지니아의 지적에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테니스 선수, 풋볼 선수들, 프



우체국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팬데믹에서 안전한 우편 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대

로 야구팀인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포틀랜드, 오레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인종차별 문제에 항의하며 정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단지 미국 자본주의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의 DNA에 깊숙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21세기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도전하고, 환경 문제에 도전하고, 전쟁 물이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쟁점들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나디아 이브라힘: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의 기성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상황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앞서 버지니아가 말했듯 공격적으로 시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배계급의 다른 일부,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당은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이컵 블레이크가 또다시 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건과 최근의 시위는 미국 사회에 아로새겨진 인종차별에 관해 무엇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웨이먼 베넷: 미국 자본주의는 노예제와 착취 그리고 수많은 원주민의 시체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마르크스 말처럼 피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태어났습니다.

어째서 흑인의 목숨은 소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2014년에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 손에 살해당했을 때 지배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녹화영상이 있고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카일 리튼 하우스를 보십시오. 백인인 그가 3명에게 총을 쏘지만 [경찰이] 그를 내버려 뒀다는 사실은 미국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뿌리깊고 지배자들이 불평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보여 줍니다.



6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실업 대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아주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취약하고 대중 운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아주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취약하고 대중 운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을 매우 의식적으로 비난합니다. 트럼프의 비난에 바이든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투사처럼 보이나요? 거리에 나가서 폭동이나 일으킬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면서 바이든은 사실상 운동을 비난합니다. 운동 참가자들에게 변화를 원한다면 ‘적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이 매년 반동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 KKK단이나 백인시민위원회(White Citizens' Councils)가 있었다면 지금은 백인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운동을 침묵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동지도 말했지만 예컨대 트럼프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살균제를 주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과학적 이론’을 자기 몸에 직접 실험했더라면 좋았겠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이제 ‘법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억압자로 여겨집니다. 이 운동이 제기하는 경찰 예



“팬데믹 실업 보상금(PUC) 제대로 지급하라” 인종차별은 계급 문제에 아로새겨져 있다

산 철폐는 오직 운동 자신의 힘으로만 쟁취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우리는 변화와 정의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쟁취하려면 계급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계급 문제가 연결되면 운동은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하기를, 1960년 이래 미국의 흑인과 라틴계는 다른 사람들이 버는 것의 60퍼센트만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처지가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인종차별은 계급 문제에 아로새겨져 있고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맬컴 엑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본가를 데려와 보십시오. 그가 바로 흡혈귀입니다.” 핵심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디아 이브라힘: 이번엔 버지니아에게 마이크를 돌려서 민주당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의 한 측면에 민주당의 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트럼프가 패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으려면 바이든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이 큼니다. 바이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운동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들어 줄 수 있다고 보나요?

버지니아 로디노: 운동을 대하는 바이든의 태도가 얼마나 경악스러운지는 웨

이먼이 방금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흑인들을 총으로 쏘 죽이는 대신에 다리를 쏘면 되겠다고 말한 것도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이든이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죠.

바이든에 관해서는 더 얘기할 것이 있고 더 토론을 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친(親)민주당 진보 인사들이 총에 하는 오바마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오바마는 운동을 동원 해제하는 멋진 순간을 잠깐 동안 만끽했습니다. 흑인 농구 선수들의 파업을 깨뜨린 것이죠. 오바마는 농구 선수들에게 경기를 보이콧하는 대신 [구단주, 정부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지배계급 성원 중에서 오바마는, 파업을 깨기 위해 가장 잘 나가는 흑인 선수들을 만나서 행동을 그만두게 한 뒤 ‘이것이 갈 길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바이든도 바이든이지만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바이든과 해리스는 경력이 끔찍한 인물들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선 후 지키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아예 처음부터 빠져있어요.

저희 마르크스21은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려고, 그리고 바이든-해리스가 당선하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일단 이주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살펴 보기는 하자’ 하고 그들의 공약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가족을 떼어놓아선 안 된다’는 공허한 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이주민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 놓고 구급해선 안 되지만 함께 구급하는 건 괜찮다는 식이었습니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바이든-해리스의 문제점에 대해 할 말은 차고 넘칩니다. 일례로 그들은 정체성 정치를 앞세우며 유색인 여성의 대변자를 참칭하고 마치 모든 유색인 여성을 해방시킬 듯이 굴고 있죠. 이것은 민주당이 늘상 써먹은 수법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끄떡 넘어가는 진보 인사들은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전술을 취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소개한대로 저는 녹색당 주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이번 대선에 녹색당은 사회 운동을 대변하는 후보들을 출마시켰고 저는 그들을 찍을 것입니다. 제가 제3당에 몸담은 이유는 양당 체제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선거 제도는 엉망진창이고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썩었습니다. 인종차별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선거 자금 문제, 선거인단 제도 등등, 게다가 [2000년에는 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득표 수량 상관 없이] 대법원이 대통령을 선



사진 출처 Matthew Rahn(블라카)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진정한 변화를 쟁취할 수 있다. 6월 포틀랜드 인종차별 반대 시위

택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1인은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실제로 1표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표는 말 그대로 득표수에 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을 찍는 것은 표를 버리는 것이고, 기업이 지배하는 양당 체제의 대안을 만드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녹색당원들은 대부분 활동가들이며, 바이든이나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전혀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을 지지하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운동을 키우고 이 운동의 비판 능력과 힘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가라앉히려 하는 인물이나 제도는 무엇이든 비판해야 합니다. 그동안 운동들이 터져나왔다가 가라앉은 것은 두 자본가 정당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지만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구실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트럼프를 물리치고 그가 대변하는 자들을 꺾을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거리를 달고 있는 이 놀라운 운동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합니다.

나디아 이브라함: 시청자들이 남긴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살렛 씨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현재 거리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맞서며 강력해지고 있는 공동전선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겨 주셨습니다. 또한 조슈아 씨가 “미국의 흑인과 백인, 빈민, 노동계급 여러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약속을 저버리고 부자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남겨 주셨네요. 두 의견 모두 버지니아의 말과 일맥상통하는군요.

이번엔 웨이먼에게 묻겠습니다. 바이든이 답이 아니라면, 지난 몇 달 동안 분출한 운동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좀더 질문하자면, 5월부터 시작된 이 반란을 바탕으로 진짜로 트럼프를 물리칠 힘을 건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웨이먼 베넷: 거리에서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시카고에서 교사들이 벌인 것과 같은 투쟁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니 샌더스는 이렇게 말했죠, “극소수의 이윤 추구 활동을 인류보다 중시하는 체제를 왜 감내해야 합니까?” 이런 체제에 도전할 유일한 방법은 다인종적인 미국 노동계급의 거대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인종차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거릿 미드[1901-1978]가 지적하고 [1960~1970년대] 흑표범당이 지적한 바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대중 운동만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 국가가 노예제를 폐지해야 했던 것도 거대한 운동 때문이었고, 시민적 평등권을 쟁취한 것도 대중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도 대중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대중 운동이 미국 노동계급의 힘과 결합될 때 트럼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터져 나왔을 때 틴스터[트럭 운전수나 통쇼어 항만 노동자들이 연대 행동에 나선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대중 운동이 노동계급의 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서 킹의 암살을 돌아 봅시다. 저들이 킹 목사를 암살한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킹이 가난한 노동자들, 흑

인과 백인 청소 노동자들이 피부색을 뛰어넘어 단결해서 임금 인상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대중 운동뿐 아니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거론하며 그 둘을 연결시키려 했을 때 암살당했던 것이죠. 지금 미국에선 킹 목사가 모색했던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비용을 누가 대야 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비용을 누가 대야 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지금, 단결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이고 그가 속한 당도 억만장자를 대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바이든과 해리스, 그리고 그들의 당도 역시 억만장자를 대변합니다.

결국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오네요. 민주당은 샌더스가 이런 현실에 의문을 던지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았고 샌더스를 절대 지도자로 받아들이 생각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거리로 나가고 여러 작업장으로 운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에 말 그대로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경찰이든 백인 민병대든 폭력을 동원해 현존 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늘 그래왔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 싸우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노예주들의 정당으로 출발했고 비록 그 겉모습은 바꿨지만 그 이중성은 여전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직 반란과 투쟁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디아 이브라함: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그 외의 온갖 운동들이 국가의 심각한 폭력 탄압에 직면했던 1960~1970년대 미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당시 저들은 마틴 루서 킹과 펄 컴 엑스를 암살하고 모진 탄압으로 흑

표범당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당시 투쟁에서 배워서 오늘날 적용할 교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버지니아 로디노: 그 후 우리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배계급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사태를 불리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법질서를 운운하고 공화당 전당 대회의 주된 내용도 그것이었죠. 법질서는 이제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됐습니다. 최근 시위 전까지는 일관된 주요 공약이 없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계속 저항하며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법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안전한 거리’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 우익 민병대가 거리에 있으면 안전해지는가? 통행금지령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가? 탱크가 배치되고 물대포와 최루액을 뿌리고 우리를 두들겨 패는 자들이 거리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해지는가?”

시위대를 공격한 바로 그 경찰들이 극우이자 백인인 살인범들을 유유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영상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체포당하고, 공격받고, 경찰 손에 죽는 것은 흑인들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기성 질서와 지배계급의 행태에 대한 냉소와 울분이 쌓여왔습니다. 그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가 운동을 건설할 바탕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운동 내 이런저런 전술에 관해 적대적으로 논쟁하느라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분노가 지배계급과 트럼프, 혈세로 운영되는 경찰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을 폐지하라는 요구와 그동안 미국 도처에서 거둔 실질적 성과들이 실로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보며 ‘무엇이 진정한 폭력이고, 진짜 폭력적인 것은 누구이고, 누가 폭력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점입니다. 운동 내 다른 구성원들을 적대하거나

운동과 단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폭력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웨이먼 베넷: 오늘은 흑표범당의 창당 멤버인 프레더릭 햄프턴의 생일입니다. 그는 인종차별, 여성차별에서 국가 간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려면 혁명적 정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뜻을 채 펼쳐 보기도 전에, 잠을 자던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햄프턴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동계급이 독자적인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햄프턴은 그 혁명정당이 다인종적이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왜 다인종적 운동이 필요한지 잘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대 말 디트로이트에서 결성됐던 ‘도지 혁명적 노조 운동’(DRUM)은 운동이 노동계급의 힘과 만나면 폭력에 덜 직면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을 때 경찰 폭력에 덜 직면했습니다. 이윤에 대한 자본가들의 우려와 노동자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종차별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잘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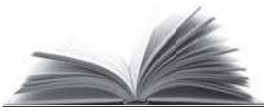
인종차별은 사회의 최상층에서 생겨나고 이 사회의 성격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기보단 쓰레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트럼프가 얼마 전 러시모어 산을 등지고 연설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모어 산에 새겨진 인물 중에는 노예 소유주였던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종차별은 미국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과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로 시작된 미국 역사를 깊숙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부를 쌓은 지배자들은 각지에서 유입되는 이주민들을 [인종차별을 이용해] 배척당하게 하고 착취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실로 악몽이었습니다.

지배자들의 폭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맞선 대중 운동과 지도력을 건설해야 합니다.

미국인 상위 1퍼센트가 미국 전체 부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단선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분열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인종적 차이를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는 극우를 물리치려면 운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잘 알아야 하고, 불평등에 기초한 거대한 기업 중심 체제에 도전할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흑표범당이 결성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흑표범당은 다인종적이고 근본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적 당입니다. 그런 당의 지도력을 건설해야만, 정의와 평등을 한사코 거부하는 자들을 약화시키고 꺾을 수 있습니다.

녹취 한가는 번역 김중환



서평 |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차승일 옮김, 책갈피)

인종차별의 원인과 해방 전략을 알기 위한 알짜배기 필독서

이현주

5월 25일 미국 경찰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케 한 일은 오늘날 우리가 끔찍하게도 인종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인종과 국적을 뛰어넘는 광범한 대중 운동으로 분출했고,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다. 이 운동은 플로이드 사망 후 100일이 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인종차별을 선동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에 자극받은 인종차별적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계속 날뛰고 있다. 경찰의 흑인 살해도 멈추지 않았다. 이런 끔찍한 인종차별을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유용한 답을 제시하는 책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책갈피)가 출판됐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책을 썼다. 캘리니코스는 현재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마르크스주의가 인종차별 등 차별 문제를 다루는 데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흔하다. 그러나 캘리니코스는 이런 생각이 오탁이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인종차별을 이해하고 그에 맞서 싸우는 데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캘리니코스는 이 책에서 인종차별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지를 유물론적 방법으로 다룬다. 특히 캘리니코스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여러 전략들을 논쟁적으로 다루는데, 여기에는 급진적 인종차별 반대 전략의 일부인 흑인 민족주의가 제기한 주요 쟁점들도 포함돼 있다.

저자는, 흔히 “서로 전쟁을 벌이는 여러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식으로 묘사되는 인종차별이 실제로는 “착취적 사회구조에서 생겨나서 권력과 삶의 기회 면에서 체계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차별이자 현대의 문제”(이하 인용 강조는 모두 저자의 것)임을 역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정치적 투쟁에 놓여 있고”, “계급투쟁만이 피부색과 출신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단결시켜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분열이 깨지다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 재봉공조조의 임금 인상 파업에서 함께 팻말을 들고 있는 흑백 노동자들.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규정한 짐 크로 법 하에서조차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들은 한데 결속한 경험이었다

캘리니코스는 인종차별이 자본주의 초기 체계적 노예노동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17~18세기에 처음 개발된 것이고, 노예제가 폐지된 오늘날에도 자본주의의 물질적 조건 때문에 인종차별이 지속된다고 밝힌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일자리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노동자 집단들 사이에 조성된 분열에서 발생한다. 이런 경쟁은 노동력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자본의 한없는 식욕 탓에 때때로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한 나라로 모이면서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노동자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고 (피부색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을 한다.”

즉,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유지에 일조하고 그림으로써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돕는다.

반면, “인종차별이 작동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동자 전체의 이익”은 “훼손”된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노동계급을 분열시켜서 흑인 노동자는 물론이고 백인 노동자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백인 노동자가 인종차별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종차별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우월한 인종에 속한다는

가상의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인이든 흑인이든 노동계급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캘리니코스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학자 시몬스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다.

분석과 대안

이런 분석은 대안과도 연결된다. 캘리니코스는 흑인 해방은 오로지 흑인 자신만이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흑인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서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일반으로 말해, 계급투쟁의 수위가 높을수록, 노동자의 투쟁성·자신감·조직이 강할수록, 특정 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층이 다양할수록 인종차별이 노동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약해진다.”

노동계급의 힘이 커지고 투쟁으로 권력자들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면, “가상의 위안”에 기댈 가능성이 적어진다. 캘리니코스는 흑인 노동자와 백인 노동자가 인종 간 장벽을 뛰어 넘어 결속하고, 이 과정에서 인종에 따른 분열이 깨졌던 여러 경험을 소개한다. 반대로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지배자들과 협력하고 노동계급을 배신해 노동계급의 처지가 악화됐을 때 인종차별이 강화됐음도

지적한다.

이 책은 짧지만 풍부하고 아주 명료하다. 쓰여진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놀랍게도 전혀 옛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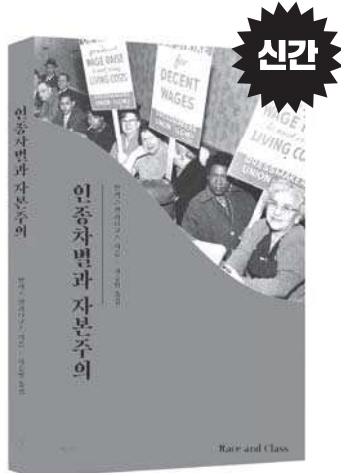
이 책의 원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992년 여름호에 실린 동명의 논문(국역: ‘인종과 계급’, 《현대자본주의와 민족문제》, 갈무리, 1994)을 대폭 수정하고 증보해 1993년에 출판한 책이다. 그 과정에서 한 장이 수정되고 3개 장이 추가됐는데, 논문 국역본을 본 독자들도 완전히 새롭고 풍성해진 글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의 훌륭한 번역도 돋보인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새로 추가된 장 중에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반란을 다룬 장이 특히 흥미로울 만하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한인 상점 약탈 문제를 주로 다뤘다(‘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한 한국 언론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이고 천박한 보도와 달리 캘리니코스는 반란의 진정한 성격, 로스앤젤레스 사회에서 한인 상인들이 차지한 지위, 반란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하면서 여러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 책이 소개하는 사례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의 것들이지만 그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캘리니코스 자신도 머리말에서 “이 책에서 ‘흑인’이라는 단어를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겪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썼다”고 밝히며, 이 책의 분석을 차별받는 다른 집단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차별을 개인들의 태도와 의식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차별받지 않는 집단은 계급과 상관없이 차별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차별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맞설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한국의 여성·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이에 관해, 이 책에서 캘리니코스가 흑인 민족주의 전략을 다른 부분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종차별뿐 아니라 차별 문제 일반을 이해하고 차별에 맞서고자 하는 독자들이라면 이 책을 곱씹으며 읽어보기를 권한다.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차승일 옮김, 책갈피, 156쪽, 8,000원

신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_____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_____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휴대전화번호 _____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이메일 _____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피트 굿윈이 1983년에 쓴 'Is there a Future for the Labour Left?'을 김준호 기자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편집·번안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집

권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일은 실제로 있다. 20세기 영국 노동당 정치인들의 회고록을 보노라면, 공직에서 있을 수 있는 유혹과 부패를 집대성한 카탈로그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사민주의 정당에서 의원단이 당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정당에는 당과 연계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노동조합원이 아닌 당원도 숫자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당내 좌파들이 이런 당원 대중을 이용해 의원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노동조합

먼저 노동조합 문제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듯해도 사민주의 정당에서 노동조합은 핵심 세력 중 하나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원 개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력이다.

노동조합은 사민주의 정당을 직접 창당하거나 창당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초기 의원단도 노동조합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은 사민주의 정당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당대회에서 많은 대의원들의 표를 차지우지 한다. 대부분의 시기 노동조합은 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당내 격변이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 한복판으로 직접 발길을 들이밀기도 한다.

노동조합이 사민주의 정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논할 때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첫째, 노동조합이 당 내에서 발휘하는 강력한 힘은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노동조합이 당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이는 평조합원들이 직접 사민주의 정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조합 관료 및 상근 활동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 노동조합 관료의 사회적 지위는 노동자들과 뚜렷이 다르다. 이들은 '상근'이라는 말 그대로 작업장을 떠나 있고, 조합원들보다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소득도 더 많기 일쑤다. 이들은 모두 전문 협상가들인데, 미국의 급진적 사회학자 C 라이트 밀스는 그런 점을 꼬집어 노동조합 관료를 "불만 담

당 관리자들"이라고 불렀다. 노동조합 관료와 상근 활동가들은 모두 기성 사회 유지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그 이해관계는 그들이 조합원들의 불만을 대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특성은 산업 투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가장 우파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도 때로 파업을 지지한다. 그러지 않으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모조리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장 좌파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도 노동자 투쟁이 '너무 멀리 나아가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의 기초인) 노동조합 조직을 위협에 빠뜨릴까 걱정한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관료들이 노동운동에서 하는 구실은 근본에서 보수적이다. 이는 그들의 정당인 사민주의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수적 영향

그러나 세 가지 점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당에 보수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가려지곤 한다.

첫째, 때로 노동조합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의원단과 대립한다. 예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배타적 지지(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의원단의 사회연대전략(노동자 양보론) 방침이나 정당 지도부의 친노 세력과의 통합 추진을 비판하며 대립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본래의 보수적 방침으로 되돌아가, 상황이 '너무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당 대의원 표를 이용해 당내 좌파를 단속한다.

둘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조합원들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 좌파들은 의원단을 통제하지 못한다

을 언제나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거슬러 좌파적 투표를 조직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언제나 노조 활동가들 수준에서 벌어진 반란으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광범한 정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노조 지도부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고삐를 쥌 수 있다.

예컨대, 영국 노동당 1960년 당대회에서 좌파들은 일방적 핵무기 폐기를 통과시켰지만 바로 다음 해 당대회에서 노조 관료들은 이를 뒤집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1980년대 초 토니 벤이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지도자로 급부상했지만 이듬해 당 대회에선 당내 좌파 경향인 밀리턴트에 대한 마녀사냥이 통과되기도 했다.

셋째, 노동조합 관료 중에 언제나 좌파 관료가 존재하고 이들이 우파 관료와 앙숙인 듯 보인다는 점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 일반이 당 내에서 오른쪽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이 가려진다.

물론 노동조합 지도부 좌우파 사이의 차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되지 못한다. 결정적 순간에는 '좌파' 지도부도 의원단을 확고히 지지한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산업 투쟁에서와 똑같은 구실을 사민주의 정당에서도 한다. 노동조합 관료라는 매우 특수한 사회 집단으로서, (개인 별로 성향이나 수사가 다를

지언정) 정당에 대한 이들의 이해관계는 모두 동일하다. 바로 '책임성 있는' 사민주의 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를 중재하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

사민주의 정당 내 좌파가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도전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층위로 되어 있다. 첫째, 사민주의 정당 내 좌파 대부분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통념을 받아들인다. 이들은 작업장에서나 노동조합에서 조직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당내 좌파 활동가들이 소속 노조에서 열성 조합원인 경우는 많지만,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당 활동에 견주면 부차적이다. 당내 좌파가 이끄는 지역위원회가 노동자 파업에 집단적으로 연대할 때도 있지만, 그 지역위의 핵심 활동은 따로 있다.

실례로, 영국 노동당 내 전통적 좌파의 간행물을 훑어 보면 그 긴 역사 속에서 파업 투쟁을 체계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영국 노동당의 좌파는 작업장과 노동조합에서의 조직화를 통한시켰고 공산당 등 대개 다른 조직들이 그 일을 맡았다.

바로 이 점에서 둘째 이유가 나온다.

사민주의 정당 좌파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힘을 기울일 때는 노동조합 좌파 관료에 의존한다. 한국에서는 정의당의 좌파도 대체로 첫째와 둘째 경향을 모두 보인다.

그런데 노조 좌파 관료의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예컨대 1971년에 영국 노동당 좌파는 노조 선거에서 우파 관료 대신 좌파 관료를 당선시키는 '범좌파' 전략을 쫓아 휴 스캔런을 급속 노조 위원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스캔런은 노동당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앞장섰고 임금 인상 투쟁을 억제했다. 이 때문에 영국 노동운동이 재앙적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노동당 좌파도 재앙적 타격을 입었다.

또 사민주의 정당에서 당내 좌파는 우파에 견주 개별 당원들 수준에서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개별 당원들은 당내 권력 구조에서 언제나 노동조합보다 부차적이다.

더욱이 사민주의 정당의 당원 다수는 수동적으로 당비만 납부할 뿐 다른 당 활동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열성 당원들이 모두 노동계급인 것도 아니다. 전문직·중간계급 당원이 노동자 당원보다 일과 후 지역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기 쉬울 것이다. 결국 당내 좌파를 지지하는 적극적 기층당원들은 숫자도 비교적 적고 노동계급에 깊이 뿌리 내리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선거를 위한 조직

사회주의자에게 진정 중요한 문제는 주변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느냐다. 그런 점에서 사민주의 정당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까다로운 제약으로 작용한다.

사민주의 정당은 근본에서 **선거를 위한 조직**이다. 선거 승리가 이당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다. 당 지역위나 각종 기구가 모두 이 목적에 전념한다. 지역위는 아예 선거구를 기반으로 짜여져

있다.

선거 조직이라는 이 당의 특성은 당 지역위 활동가들의 일상 활동을 결정짓는다. 이 활동가들은 당이 집권하거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을 때 파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선거운동 방법과 모금 방법 등을 고민한다. 지역위 모임 중 출석률이 가장 높고 당원들의 관심도 가장 뜨거운 모임은 공직 후보를 선정하는 모임이다. 지

역위 활동이 최고조에 이를 때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파업 지지, 일반적 정치 쟁점에 대한 토론 등 다른 모든 활동은 기껏해야 부차적이다.

사민주의 정당을 '대중적 투쟁 정당'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심지어 좌파가 장악한 지역위에서조차 기껏해야 설왕설래 수준에 머물 뿐이다.

이런 선거 지향성은 당내 좌파 활동가들에게 오른쪽 압력을 크게 가한다.

매사가 선거 승리라는 목표에 맞춰 돌아간다. 잠재적 지지 표를 떨어뜨리는 일은 삼가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치적 주장을 가장 활발히 펴는 때는 흔들리는 무당파를 잡으려 할 때다. 논란이 있는 쟁점에는 말을 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예컨대, 정의당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 논란 등에서 말을 아낀 것을 떠올려 보라.

일단 선거를 우선시하게 되면 당면

선거 승리가 모든 것에 앞서는 가치가 된다. 결국 사민주의 정당 내 좌파의 구실이 중요해지는 선거에서 정작 좌파적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사민주의 좌파 활동가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제 생각에 우리당 지도부는 철저히 계급연합적이고, 전 쟁 문제에서 광적인 애국주의에 사로

▶ 13면으로 이어짐

조국 ‘아빠 찬스’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엄마 찬스’ 의혹?

김문성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빠 찬스’가 문제가 된 지 꼭 1년 만에 또다시 현직 법무부장관의 ‘엄마 찬스’ 의혹이 번진 것이다.

서 씨는 2016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미2사단지역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서 씨는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고(보통 탈영으로 규정) 사후에 휴가 연장으로 처리해 무사히 넘어갔다. 이 문제는 이미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청문회 때 나온 것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그 위기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시점은 추미애가 기세 등등한 집권당 당대표일 때였다(군 복무 기간 전체가 추미애의 당대표 기간과 겹친다). 게다가 서 씨의 휴가 기간은 관련없는 상급부대 장교가 서 씨의 부대를 방문해 휴가 연장을 지시한 6월 25일이 아니라 23일에 종료됐다.

따라서 이 의혹의 본질은 집권당 당대표로서 아들의 군 복무에 특혜 청탁

이나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다.

점입가경으로 이번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 의정부 기지에서 용산기지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바주기 수사 의혹도 나왔다. 서 씨 휴가 관련 특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서 씨에게 불리한 증언(추미애의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관련 전화를 했다)을 수사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의혹이 늘어나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희한하게도 누락의 당사자가 수사팀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8개월째 끌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동부지검을 포함해 관련 수사 보고 라인은 추미애가 인사를 통해 검찰총장 윤석열 라인이 아닌 인물들로 채워 놓았다. 그해 놓고는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소셜 쓰네”라거나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둥 일축하기로 일관해 왔다.

명백하게 휴가 후 미복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하고 그나마 휴가 연장을 위한 서류조작 누락된 상황인데도 군이 자체 수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구린내가 많이 난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행정 미숙이라고 변명했다.

민주당은 조국 때와 마찬가지로 필사적으로 추미애를 방어하고 있다. 밀리면 진다는 자세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권력층의 특혜는 관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도 뻔뻔하게 말한다. 카투사는 원래 편한 곳이라거나, 군대를 안가도 될 청년이 고위 정치인인 엄마 때문에 군대를 갔으니 오히려 기특하며 청년들 염장을 지른다.

심지어 추미애를 20년간 보좌했다는 전직 보좌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보좌관들을 삼촌이라고 불렀온 서 씨가 직접 부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을 해명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 세계의 사고방식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번 추미애 의혹은 정부와 여당 고위 정치인들도 완전히 사회 주류의 일부로서 특혜의 별세상에 살면서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선과 기만을 부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문재인이 지시하고 추미애가 앞장선 검찰 ‘개혁’이 실은 현 정권의 권력층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노동자 연대〉신문의 지적이 또다시 입증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층 부패 수사를 막는 데 앞장서 온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으로 정부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 12면에서 이어짐

잡혀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부터 이주진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조리를 러먹었습니다. … 다음주 선거에서 우리 당에 한 표 부탁 드립니다!”

오늘의 열렬한 좌익 투사가 내일의 의원‘님’이 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에도 비슷한 논리가 작용한다. 물론 개인의 야욕이나 부패도 영향이 있다. 개인의 영달 때문에 배신한 사람은 사민주의 정당 안에선 밖에선 넘쳐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이다.

사민주의 정당의 선거 중심 사고 방식에 따르면 국회의원 배치나 장관직은 ‘사회주의를 실현할’ 핵심 도구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공직 자리를 부지하고 그 자리를 이용해 ‘사회를 조금씩 진보적으로 바꾸려 애쓰는’ 것이 당

연한 일이 된다. 당내 좌파 활동가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좌파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당내 우파에, 심지어 자본가 정당에 돌아갈 것이다.’

최선의 경우에도, 그 좌파는 ‘위로부터 운동을 건설하는 것, 즉 원의 활동을 핵심 목표로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민주의 정당 좌파가 공직 선거에 출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당내 좌파 후보라서가 아니라 사민주의 정당 후보라서 표를 던지는 것이다. 꼭 이 후보의 ‘좌파적’ 주장에 동의해서, 혹은 이 후보가 선동하는 운동에 참가하겠다는 뜻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좌파 국회의원들도 자신

의 입장을 숨기고 이런저런 쟁점에서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의석을 잃고 자기가 가진 그나마의 영향력도 잃을 것이라 믿어서다.

사민주의 정당이 역사 속에서 보수적인 면모를 거듭 보이는 것, 당을 좌파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이 거듭 실패한 것은 그저 과거의 단발적 실수가 아니다. 정당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고, 의원단만이 아니라 당 전체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당내 좌파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곧 그 의미가 퇴색됐다.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조합 관료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구성된 정당이다. 이것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실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갓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스타항공 정리하고

정부가 국유화해 노동자 일자리를 지켜라

이정원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700여 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놓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해고 계획 발표 후 강요된 ‘희망퇴직’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4~5월에 500여 명을 감축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200여 명을 해고한 것이다.(그 결과 이제 400명가량의 노동자만 남았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올해 내내 임금 삭감과 체벌로 노동자들에게 경영 악화의 책임을 떠넘겨 왔다. 그러더니 이제 정리해고가 “이스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타개책”이라며 끝까지 희생을 강요했다.

사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위기에 빠진 탓이 크다며 고통 전가가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말한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사측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일자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사측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매각을 성사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사활적인 것이다. 무산된 제주항공 인수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타항공 사장은 정리해고가 “현재 인수의향을 밝힌 측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갔나 9월 8일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한통속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위기 동안 정부는 항공사에 3조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눈꼽만큼도 불과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정부는 제주항

공에 1700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하며 매각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항공이 끝내 인수를 포기하자, 정부는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위기에 처한 것을 뻔히 알고도 완전히 외면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스타항공 측에 ‘선 자구 노력’을 요구하며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결국 이스타항공 사측과 정부가 한통속이 돼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만든 진정한 책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고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스타항공의 노동자 1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인 전 회장 이상직은 민주당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212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도 저비용항공사 설립을 부추기며 위기를 키워 온 장본인이다. 2000년대 이후 항공 산업이 호황을 누자, 정부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저비용 항공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 왔다. “경쟁 촉진”을 이유로 신규 항공사 면허를 내주고 지원해 왔다.

저비용항공사 수익이 악화되자, 이제는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추구하면서 애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이스타항공 매각도 이런 과정의 일부였다.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 요구는 정당하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가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야 한다.

이번 대량 정리해고 사태는 다시 추진되는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그것이 고용을 지킬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인수합병은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 쏟아붓는 돈의 극히 일부인 수백억 원을 투입하면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만큼, 노동운동은 국유화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에게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마저 무시한 것을 보면, 애당초 보수위를 이용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 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이조차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수치이므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은 더 열악하다.



코로나, 태풍 등으로 공무원 과로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철밥통”이라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인식 조사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낮은 임금’(54.9퍼센트)이었다.

고통 전가

지난 6개월 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태풍·폭우·폭염 등에 대처하며 버텼다. 과로사하는 안타까

운 일들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올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삭감했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막대한 돈이 들었으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 반납, 성금 모금 등 고통 ‘분담’을 강요해 왔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경력 인정 하향에 따른 임금 삭감, 반

납을 시도하는 등 고통 전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서기로 했다(‘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와 핵잠수함, 경항공모함을 도입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퍼센트 증가해 53조 원에 이른다. 1차 재난지원금에 든 돈이 14조여 원이었다는 것을 보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노동자·서민의 생활 안정이 얼마나 뒷전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이윤 지키기와 군비 증강을 위해 돈을 쏟아부으며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도록 만들려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격에 직면해 노조가 “허울 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

닌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가 되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 설치”(9월 1일 자 ‘공무원노조 공동성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간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고통 전가 시도에 제대로 맞서기 보다는 보수위에서 “실질임금 삭감 조치 수용”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양보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삭히는 데 일조했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청년조합원 인식 및 요구조사 보고서〉(2019년 6월)를 보면, 노동조합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응답자의 98.5퍼센트가 ‘공무원들의 권익(임금, 근로조건 등)을 대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필요하면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교섭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68.3퍼센트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대변하고 모아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코로나 6명 확진 (9월 9일 현재)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사측과 정부의 책임이다

권준모 현대중공업지부 소위원

9월 9일 현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이들 중 다수는 9월 6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115번 확진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다.

사측은 전체 8층 건물에서 확진자들이 근무한 외업 1관 3층과 2층 식당을 하루만 출입 통제했고, 외업 1관 건물을 사용하는 노동자 2000여 명 중 3층 근무자 300여 명만 자택 대기시켰다. 300명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24명은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했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조치다. 115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에 2층 식당에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식사했다. 한 노동자는 이 확진자와 함께 3층 목욕탕에서 씻고 대화를 나눴는데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과 사측이 매우 불충분하게 대처한 것이다.

실제로 9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사측은 부랴부랴 외업 1관의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15번 확진자의 노동자 접촉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었다. 그는 확진 판정 직전에 현대중공업 사내에 있는 부속의원을 방문해 체온이 38도가 나왔지만, 간단한 약 처방만 받고 근무를 지속했다. 사측은 체온이 37.5도 이상만 돼도 “다른 노동자와 분리” 조치를 취하라는 고용노동부 지침조차 무시한 것이다.



지난 3월 혼잡한 사내 식당. 식당 이용 3부제는 얼마 못 가 폐지됐다(위) 태풍으로 공장 일부의 가동이 중단됐는데도 사측은 비좁은 대기실로 노동자들을 모았다(아래)

지금 115번 확진자가 근무한 외업 1관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에서도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곳곳에서 확진 가능성이 생기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태풍 하이선으로 공장 일부가 멈추자 해당 부서 노동자들을 비좁은 사무실에 모여 대기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기후 위기(빈번한 집중호우와 태풍)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사용자들은 노



사진: 권준모 (위) 사진: 김경택 (아래)

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착취에 더 골몰하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사실 그간 사측은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부서별로 지급해야 하는 체온계를 매우 느리게 보급했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과 붙어 있는) 현

대건설기계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도입한 점심시간 3부제(3개 조로 나눠 식사하는 것)도 금세 폐지했다. 점심시간 3부제로 매우 혼잡한 식당 상황이 그나마 개선됐지만, 점심시간이 늘어나자 폐지한 것이다. 생산 차질을 더 걱정했던 것이다.

이번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노동조

합이 외업 1관 폐쇄, 검사 대상 확대, 점심시간 3부제 부활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3부제 도입과 건물 폐쇄를 거부했다. 검사 대상을 3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외업 1관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는 건 아니다. 또한 음성이 나오면 바로 업무에 복귀시켜서 잠복기 이후 다시 양성 나올까 봐 걱정하는 노동자도 많다. 제대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건물 폐쇄와 3부제 도입은 물론,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다. 집단감염 위험이 커지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기업 활동은 멈추지 않게 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사실 노동자 생명보다 기업 이윤을 더 중시해 왔다.

기업 지원에는 600조 원 가까이 쓰면서, 1차 재난 지원금은 14조 원밖에 안 됐다. 그마저 2차 지원금은 대폭 삭감했고 선별 지급한다. 일자리 지원금도 10조 원이 채 안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것을 보면,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감염이 발생해도 기업 활동을 중단시킬 생각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사측은 한 목소리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출근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근본 원인이다.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네이멍구 중국어 수업 확대 반대 시위 — 소수민족 탄압하는 중국

최근에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골자치구, 이하 네이멍구)는 지난달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간 몽골어로 가르치던 ‘중국어’ 과목을 중국어로 가르치는 ‘어문(국어) 과목’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과 후년부터는 각각 도덕·법치(정치)와 역사 과목도 기존 몽골어에서 중국어로 수업언어를 바꾸기로 했다. 교과서는 중국 당국이 펴낸 통합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이중언어 정책으로 인해 중국 남부에서도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홍콩의 초등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광둥어가 금지됐다.

몽골족들은 이 정책이 사실상 몽골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몽골족 학부모들과 자

녀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교사들과 언론인, 유명 연예인들도 반대한다. 독립국인 몽골국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연대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2011년 중국 정부의 민족차별 정책과 환경파괴에 항의하던 몽골족 목동 메르겐의 사망으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이다. (2011년 6월 2일자 본지 기사 ‘30년 만에 분출한 네이멍구 몽골족의 반정부 시위’ 참조) 그 이후에도 몽골족들의 시위는 끊임없이 일어났었다.

소수민족 탄압

중국 정부는 이번 시위를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한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지역 공산당원들에게 학생들의 등교 할 때까지 부여했다. 심지어 공안국장은 최근에 네이멍구와 몽골족이 거주하

는 념샤회족자치구를 방문하면서 강한 시위 진압 의지를 보였다. 아무래도 신장위구르자치구에도 몽골족이 거주하고, 티베트인과 몽골족 모두 같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는 점에서 시위의 확산을 경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게 네이멍구는 석탄과 희토류 등 자원이 풍부하고, 베이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기 중요하다. (또한, 몽골족 인구가 몽골국보다 더 많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매우 예민하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내몽골의 “독립”을 지지하며, “괴뢰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던 몽골족들을 끌어들이 자치정부를 세웠다. 이 때 공산당이 펼친 정책은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낸 1949년 혁명 이후, 중국의 다른 소수

민족 정책의 기본이 됐다.

(한편,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원을 받아 독립을 쟁취한 몽골은 중국 군벌·국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스탈린의 정책 때문에 내몽골의 독립을 지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나는 네이멍구 몽골족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몽골족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네이멍구는 물론 중국의 다수 민족인 한족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중요하다. 네이멍구의 한족들도 몽골족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난개발과 황사와 같은 생태 파괴, 코로나 사태는 물론, 최근에 네이멍구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엥겔스는 영국 노동자계급이 약한 이유로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영국 정부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부 한족들도 소수민족의 독립을 반대할 수는 있어도,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차별을 지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일어난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고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한 1989년 톈안먼 항쟁 때도 위구르족 우얼카이시가 주요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반면, 소수민족 탄압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을 능가하고 공산당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차이는 극명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우주정거장이나 고속철도,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소수민족은 물론 한족의 다수 노동계급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김재원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김승주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을 배분했다고 생색을 낸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한다. 우파들은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이 때문에 재정 적자가 급증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11퍼센트 정도(2018년)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은 많기는 커녕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세히 보면, 내년에 늘어날 복지 예산 20조 원 가운데 12조 원가량은 법률에 따라 지출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이다. 예를 들어 5조 원가량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인 것이다.

정부가 4대 중점 투자 중 하나로 내세운 고용·사회안전망 분야도 큰 개선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6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예산은 1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고, 급여액 산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고용안전망 분야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200만 개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겠다고면서 고작 8조 원을 배정했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예산은 2500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13만 개 창출에 8500억 원을 배정한 것과 비교해 보면, 내년에 만들 일자리가 매우 적거나 저질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난 건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실업 급여로 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출산을 저하할 이유로 내년 신규 초·중등 교원 수도 축소된다. 교육 부문 예산은 12대 대표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2.2퍼센트 줄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감염병 대

응 필요에 건뒀다. 관련 분야인 “K-방역” 예산은 2조 원이 채 안 되고, 이 중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은 6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산업화”(의료기기 연구·개발, 바이오-ICT 융합 촉진 등)와 “세계화”(K-방역 홍보)에 배정됐다. 다시 말해, 의료 영리화와 방역 성과 치장하기에 치우쳐 있다.

돌봄 지원 예산도 쪼끔 증가에 그쳤다. 시간제 아이돌봄 예산은 1550억 원으로 고작 146억 원 늘리고는, 아이돌봄 노동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이용 가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초등돌봄 예산도 130억 원 증가에 그쳤는데 이용 인원은 5만 명이나 확대하겠다고 한다. 늘어나는 아이 한 명당 고작 26만 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이미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오랫동안 시달려 온 돌봄·보육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운 처지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전폭 지원과 ‘뉴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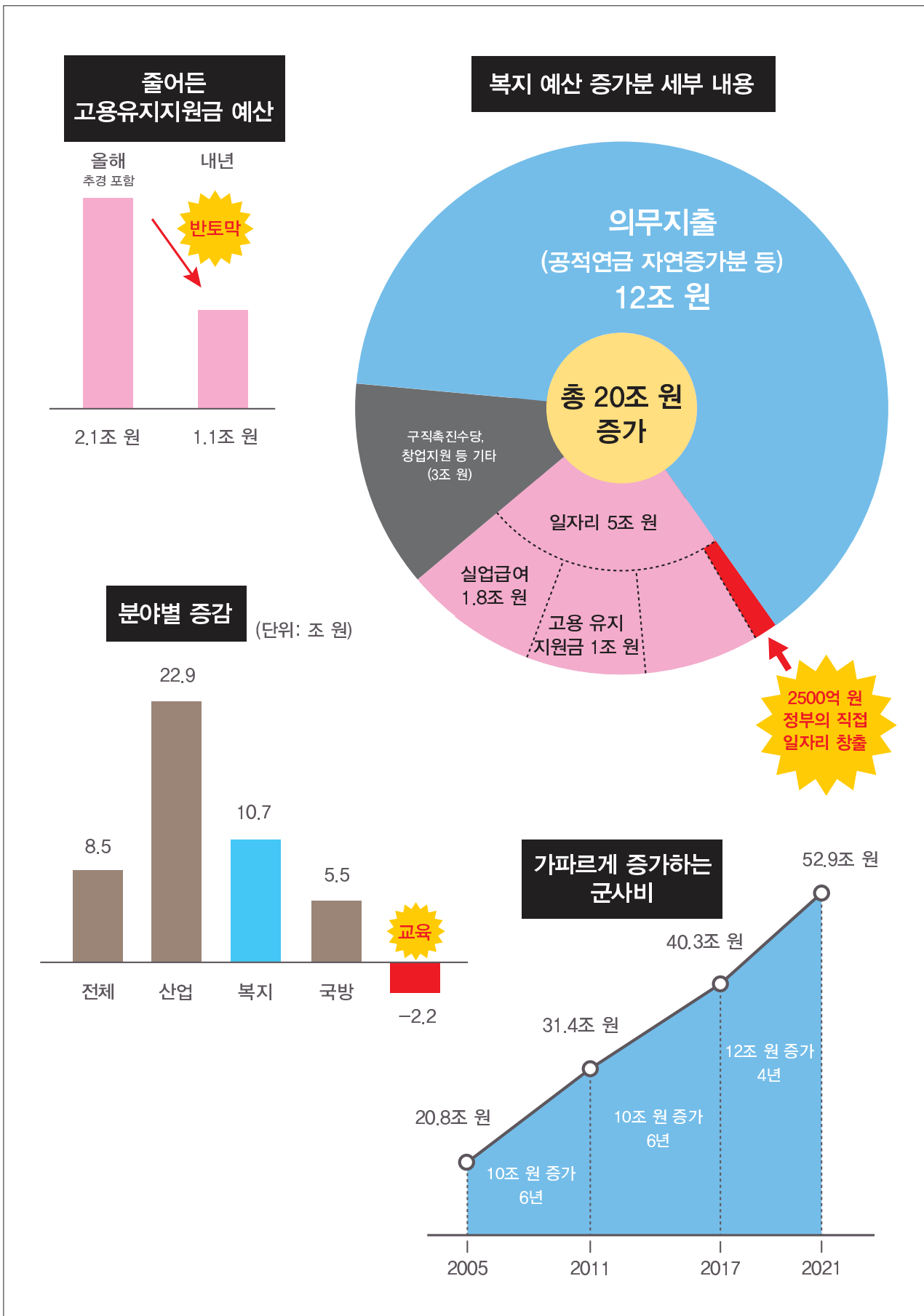
반면, 기업주를 지원하는 예산과 정책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12대 대표 분야 중에서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23퍼센트나 늘어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복지 예산은 10퍼센트 증가)

예산안에서 가장 강조된 한국판 뉴딜에는 21조 3000억 원이 배정됐는데, 노후한 공공 건물 리모델링 등 무늬만 ‘그린’인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부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청년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실상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입력하는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와 별도로 민간(기업) 투자 지원 예산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해보다 30퍼센트 이상(10조 원) 늘어난 40조 원이 배정됐다. 이 돈 대부분은 기업용자 지원에 사용되고 일부는 ‘뉴딜 펀드’ 조성의 마중물로 사용된다.

뉴딜 펀드는 기업들의 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띄운 ‘돈 끌어모으기 프로젝트’다. 정부 재정 수조 원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대형 은행이 출자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총 1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가 투여한 재정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3퍼센트 수익률 보장,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하니 여윌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이 펀



드 투자로 이득을 볼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모은 돈은 ‘뉴딜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특별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 기업’들에게 인허가 기준 등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재정의 우선순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발표 이후 “확대 재정에 따른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시 말해

부자 증세는 안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며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실질임금 삭감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116곳의 운영 경비를 5퍼센트 이상 감액하겠다고 한다. 기업 지원을 하느라 발생한 재정 적자를 공공 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3조 원에 이르는 군사비는 줄일 생각이 없다. 국방예산은 지난 3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증가 속도가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두 배나 빠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선다는 계획(“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9월 7일 문재인은 재정 상의 어려움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재정이 정말로 없는 게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다.

장기화하는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 속에서 평범한 다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친기업적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